

## 예시1

※ 2021. 4. 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약개발단 『I MOM HAPPY 프로젝트』를 참고하여 가공한 정책 제안 아이디어입니다.

### [현황]

0.84, 198개국 중 꼴찌(UN인구기금, 2020 발표)

K-pop, K-beaty 등 전 세계 문화의 기준을 새로 쓰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세계 꼴찌를 기록한 부분이 무엇일까? 바로 출산율입니다.

문제인 정부처럼 말로만 출산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환경, 아이를 기를 환경을 마련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수권정당인 국민의힘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 [정책 대안]

-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으로 「임신·출산 육아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 현재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금액은 60만원(다태아 100만원)으로 안전한 출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기 검진을 받기에도 부족하고, 추가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급여를 개선해야 합니다.
  -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기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 받을 수 있지만,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이상 되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고위험 산모와 같이 출산 전 장기간 안정이 필요한 산모는 별도의 휴직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력단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 목적의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에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이후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만원, 하한 70만원)를 지급하는데, 이는 급격한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육아휴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 하한 기준을 올리고, 통상임금 80%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 난임시술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 현재 법적 혼인상태 혹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지원받는 난임부부 시술비는 시술횟수 및 연령별로 차등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차등지원을 폐지하여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이른둥이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정부는 만5세(60개월)까지 조산아/저체중 출산아에 대한 외래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둥이는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 대사질환에도 취약하며,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서도 만삭아에 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만큼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둥이 생애주기통계 확충 및 관련법 입법화 등 이른둥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이 현실적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예시2

※ 21대 총선 당 공약사항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리,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참고하여 가공한 정책 제안 아이디어입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행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멋진 경찰을 꿈꾸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동기)

대학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NO~! “그것을 막고 싶다” YES~!

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를 하며 들었던 몇 가지 아이디어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제안)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생활화!

CPTED란? 범죄예방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어입니다. 건축환경 설계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1) 아파트, 학교, 공원 등 도시생활공간 설계 단계부터 (2)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의 적용 (3)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까지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사례)

2005년 일본의 나라현에서는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푸른색 불빛의 가로등을 설치하였고, 2년 뒤 범죄건수는 15% 가량 줄었습니다. (2005년 2만1,365건 -> 2007년 1만8,299건)

이후 인근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등 지자체 16곳에서 벤치마킹해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정책1> 주택 건축 설계허가시 [CPTED 지수] 활용

공동주택, 원룸, 아파트 가릴 것 없이 주거용 건축물 설계시 최소한의 [CPTED 지수] 충족을 건축법상 설계 허가 요건으로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1) 건축물 면적당 CCTV설치 수, (2) 저층구간(1~3층) 자동 개폐식 창문 설치 의무화 등을 조건으로 한 [CPTED 지수] 설계가 필요합니다.

(안전 개념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 안전망 확충은 공공재 생산·운영을 담당하는 국가의 몫입니다. 단순히 구조물의 안전을 넘어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포함한 전방위적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전 개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합니다.

<정책2> 사회 범죄예방 [CPTED 예산] 작성 의무화

국가재정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성인지 예산 실시 의무와 효과 분석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 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에 있어 사회 범죄예방 [CPTED 예산] 분석 보고서 작성 및 편성 실시 의무화를 법으로 정합니다.

<정책3> [CPTED 설치 지원]

지역주민의 자발적 CPTED 시설물 설치를 장려하고자 표준 CPTED 시설물을 행안부장관이 작성하여 이에 해당하는 방법·범죄 예방형 시설물을 자발적으로 지역주민이 설치하는 경우 국비 또는 지자체 예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합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범죄이론(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뒤에 수습하는 식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그것을 막고 싶다”를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